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2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해외진출기업, 바이어 등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인도 신정부 ‘모디 총리’ 정책 방향

- 인도 총선이 5주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5월16일 결과가 발표. 총선 결과는 인도 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중심의 전국 민주 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이 집권 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을 누르고 정권을 교체
- 이번 정권 교체는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회의당이 집권 기간 동안 경기침체, 고물가, 부패 스캔들 등의 실정을 하면서 인도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 신정부를 구성하는 모디 총리는 전 정부와 차별화 정책을 구사하면서 정부조직 축소 및 효율적인 정부 구성, 부패 관행 척결, 물가안정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
- 인도의 침체된 경제 회복이 신정부의 가장 큰 중점사항으로, 제조업 육성, 기업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국내외 자본을 활용한 도로.공항.항만 건설 등 국가 인프라 시설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
- 우리기업은, 인도 신정부가 추진하게 될 기업 활동 여건 개선 조치, 제조업 육성 등의 경제회복 정책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확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진출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요청

모디 총리, 정책추진 톨과 정책 주요 어젠다

1. 모디 신정부, 전임 UPA 정권과의 차별화

□ 신속한 정책, 효율성 있고 책임있는 정부, 부처간 손발맞춘 결정 중시

-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를 슬로건) 부처 통폐합, 혁신마인드 확산
 - 閣内장관직 8개 포함, 전체장관직중 27개 자리를 폐지
 - * 前UPA정부는 연정파트너들을 위해 많은 장관자리 신설(정부조직 팽창)
 - 차관 직접 상대, 고위공무원 16개 그룹으로 재편, 신속한 공동결정
 - * 예) 경제장관그룹과 별도로 에너지차관그룹운영(전력, 석탄, 오일, 광산, 원자력)

장관 종류	전임 UPA정권	현 Modi정권	증감
Cabinet Minister (閣内장관)	32명	24명	8명 ↓
Minister of State - Independent Charge (閣外전임장관, 독립부서장)	12명	10명	2명 ↓
Minister of State (閣外장관-閣内장관 보좌)	29명	12명	17명 ↓

* 각내장관: 내각에서 내각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장관

- (총리실 권한 강화) 측근 배치, 책임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
 - 부처 정책 감독 및 최종 결정, 지방정부에 경청과 유기적 협조 중시
 - ☞ 구자라트州총리 당시 腹心 3인방 홍보비서, 부주무차관, 소셜미디어담당관을 발탁
- (옥상옥 장관그룹제도 폐지) 부처별 독립성과 책임제 도입
 - 주요 정책결정이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한 GOM(Group of Ministers, 21명 구성), EGOM(Empowered Group of Ministers, 9명 구성)폐지
 - ☞ 해당 부처별 책임제 도입 및 문제 발생시 총리실의 의사결정 촉진

□ 국민들에 가깝게 다가선 장관 인선

- (非엘리트) 前정권보다 가난(재산평균 1/3), 젊고, 국내파, 여성 증가

< 전임 UPA 정권과 현 모디 정권 내각 구성 차이점 >

항 목	전임 UPA 정권	현 모디 정권
평균 자산	1.3억 루피(23억 원)	4,700만 루피(8억 원)
해외 대학 졸업자	8명	1명
고등교육 미수료자	2명	5명
평균 연령	68세	60세
여성 비중 강화	2명 (7%)	6명 (25%)

2. 모디 총리 10대 국정과제 및 중점 추진

[재미 디몬, JP모건 CEO]

인도 장래를 매우 낙관하며, 20년 내에 훨씬 크게 될 것이다. 모디의 굿 거버넌스로 투자자들이 되돌아오고, 인도는 세계에서 다시 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이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전 회장]

인도는 막대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로 환율 위기를 겪는 Fragile 5 국가가 아니라 이제 Fabulous 5개 국가에 속한다.

[로이터 통신]

모디, 시진핑, 아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3명의 지도자이다. G-0 세계에서 인도 신임총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취임 4일만 10대 과제 발표, 크게 그려 빠르게 추진, 공무원 열정 되살리기

■ 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 인도 서민들의 희망과 열망을 충족시키는데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달라.

■ 정부의 성패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어떻게 전달하는데 달려 있다. 자신감을 새로 갖고 일을 즐겨라.

☞ 두려워하지 말고 일해라. 일할 자유를 주겠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내가 여러분을 보호해줄 것이다. 나에게 직접 말해 달라.

☞ 중앙부처 72명 차관을 소집, 지난 10년간 누적된 피로감이 끝날 것이다. 이제는 일을 즐겨라. 모두 재능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6.4일 전체차관회의, 장관제외)

○ (중점) 경제성장, 교육,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물가안정, 부패척결 등

○ (실천방안) 공무원 권한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행정 전달시스템 및 집행 결과를 중시

☞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낙후하고 난해한 법규와 절차 정비, 공무원의 자율권한 확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 주문

□ 중국 따라잡기 : 보다 크게 생각하라, Skill, Scale, Speed를 더 중시하라

○ 국제사회가 다시 인도를 주목,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 보다 양질의 정책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지적 투입을 대폭 높이고, 국민들을 지배하려고만 들지 말고, 정책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 하이웨이에서 i-ways 및 광섬유네트워크로 인프라 전환,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제 2 녹색혁명(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 기술, 보관창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시

□ 10대 국정과제

국정 과제	설정 배경 및 진행 방향	
공무원 권한강화	배경	· 부패한 정치문화속에 사정의 칼날에서 보신을 위한 복지부동, 소신행정 대신 책임을 분산하려는 행태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허가 지연
	방향	· 정치권으로부터의 정책 및 임기 보장을 통한 관료 권한 강화 추진
창의적인 의사결정 촉진	배경	· 지난 UPA정부는 채찍으로 한직으로 전보를 주무기로 활용 · 상관의 지시와 문서와 법규위주의 수동적, 피동적 업무수행 만연
	방향	· 외압에서 보호, 잦은 전보대신 보직기간을 늘려 책임감과 전문성 제고 · 새로운 제안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발휘 유도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배경	· 현재 보건 관련 공공부문 지출은 GDP의 1.1% 수준 ↳ FICCI, 향후 5년내 GDP 2.5% 수준으로 지출 상향조정 권고 · 인도 초등학생의 자퇴율 40%, 야무나강 및 갠지스강 수질오염 심각
	방향	· 적정수준의 기능인력 배양 · 갠지스강을 화물운송의 요충지로 활용, 수질개선 및 개발 추진
투명성 강화	배경	· 지난 UPA정부, 석탄채굴권, 통신주파수 등 대형스캔들 발생 · 모디, 총선 공약으로 블랙머니 환수 및 경제회생 촉진 설정
	방향	·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고위직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 구성 ↳ 2012년 인도인이 해외로 빼돌린 블랙머니 규모는 245조 루피(Global Financial Integrity) · 장관들에 친인척 고용 및 정부사업 계약 체결 금지 지시 · 전자정부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입찰 활성화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배경	· 인프라 환경부간 엇박자, 영역싸움등 부처간 협력부재로 대형투자 저해 ↳ 중단/지연된 프로젝트 규모 1.4조 루피 추정(스탠다드채터드 은행)
	방향	·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국민에 기초한 정부	배경	·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고조
	방향	· 총리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소통 추진 ↳ 국민이 경제개발의 중심, 국민지향, 실행지향 정부
경제 살리기	배경	· 인도, 쌍둥이적자(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및 인플레이션 문제 심각
	방향	· 작은 정부, 재정지출 축소, 공기업 지분매각, 조세행정 투명화
인프라 개선	배경	· 열악한 인프라로 경제성장을 저해
	방향	· (도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 2.5배 확대 · (철도) FDI 한도 상향조정 검토 · (스마트 시티)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 시티, 100여개 건설
시의성 있는 정책 시행	배경	· 투자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사례 증가 · 일자리 창출 부진 (6,000만개 (2001~05년) ⇒ 200만개 (2006~10년))
	방향	· 정책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
정책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	배경	· 소득세법 소급입법과 소급적용, 일방적 과세 등 일관성 없는 조세법 ↳ 글로벌 기업, 인도에 싫증을 느끼고 '엑소더스'
	방향	· 신정부, 과거 세금 추징 행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 및 조세구조 개선 · 세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징세 ↳ 인도 국세청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DWP (Data Warehousing Project) 3년 내 구축 계획

□ 부처별, 처음 100일 우선 어젠다 준비, 시행방안 및 기한 설정

- (모디 2.0) 인구구성변화, 도시화, 네트워크화(소셜미디어 확산)로 국정 운영체제를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 정보공유와 개방, 시민참여로 전환
- (2+5플랜) 2년간 적폐 수리보수, 3년째 성장
 - 두갈래 전략 : 한편으로 재정건전화, 다른 한편으로 투자 촉진
 - ☞ 재정건전화: 적자 축소, 지출質 제고, 증세, 보조금 단계적 폐지(디젤유, 취사가스 등)
 - ☞ 투자촉진: 제조산업 육성, 원가경쟁력 업종 집중 육성, 소급과세 폐지, 지방과 소통

□ 주요 경제부처 제도개선 및 경제활성화 대책 골자

부처	주요 개혁	추진 제도 및 사유
재무부	사업 환경 개선	· 정책결정구조 개혁을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 및 집행 추진 ·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투자 및 경제성장 선순환 도모 · 개정 회사법의 원활한 시행
	세제 개편	· GST(물품서비스세), 직접세법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분야 통합세제 개편 ☞ 조세행정 단순화 및 납세율 증가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 투자를 저해해온 소득세법 소급적용 조항 손질 가능성
	재정 건실화	· 보조금 등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 건실화 ☞ 재무장관 핵심정책으로, '14.5.31일 디젤가격 0.5루피 일괄 인상
산업부	제조업 육성	·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제조산업 활성화와 비중 확대
	FDI 완화	· 멀티브랜드소매유통분야는 미개방, 기타분야 개방폭 확대 · 방산 관련 FDI 한도, 첨단기술에 한해 100% 개방 발표
	프로젝트 재개	· 총 6.5조 루피상당의 프로젝트 실제 현장 상황 체크, 재개방안 강구 ☞ UPA정부가 2013년 말 투자분과 내각위원회(CCI)에서 승인한 모든 프로젝트 대상, 포스코 120억 달러 일관제철소건도 해당
	산업회랑 강화	· 산업 및 물류의 동맥 역할을 할 산업회랑 프로젝트 대폭 강화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의 적시 완공
	수출 진흥	· '2014-19 대외무역정책'을 새로 만들어, 서비스 및 상품수출 대폭 확대 ☞ 관세환급제도, 중점수출 대상국 및 품목 새로 지정, 운송비 보조등 · 특별경제구역(SEZ) 지원책 확대로 수출 경쟁력 확보
도시 개발부	스마트시티	·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거주자 친화적인 스마트시티 100개 구축
	메트로 건설	· 인도 주요 도시에 메트로(지하철) 프로젝트 시행
	위성도시 구축	· 대도시 인근 위성도시 구축 확대를 동반성장 모델(트윈시티) 구축
	주택보급	· 2020년 전인구 주택보급을 위해 주택구매 금리 인하 추진
환경부	온라인 승인	· 온라인상 인허가 승인 제도 도입 및 최대 지연시간 60일 설정
	지속가능 발전	· 성장과 환경문제의 양립문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 프로젝트에 걸림돌인 까다로운 산림 및 수자원보전 규정 완화

3. 모디의 외교정책과 주요국 반응

<주요국과 금년 하반기 정상회담 추진 계획>

- 인도주변국(부탄): 첫 방문국(6.16-17일), 인도-중국 접경국, 이웃인 남아시아 우선시
 - * 안보상 요충지 실리구리회랑 위치,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경제 및 군사협력강화
- 일본: 두 번째 순방국 (7.3~4일), 중국보다 앞서 양국정상회담 개최에 의미부여
- 브릭스 정상회담 : 브라질(7.15-16일), 이때 중국 시진핑주석과 약식 정상회담 추진
- 네팔 : 8월 첫째주 잠정
- 중국: 외교부장특사파견(6.8일), 시주석 방인 9월 전망(인도 언론)
- 미국(확정): 오바마 초청 수락(워싱턴 9.30일, 정상회담후 UN총회 연설)

□ 인도 주변국: 홀대에서 꺼안기로 선회

- (SAARC) 모디초청으로 7개국 정상, 인도 수상 취임식에 최초 참가
 -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도의 고립현상 타개 시급
 - *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8개국
- (파키스탄) 국경분쟁 및 무력대결 완화, 평화정착과 경제교류 확대
 - 인도는 파키스탄내 중국영향력 확대, 중국군 주둔 가능성을 가장 우려
 - 국경무역 확대, 시장접근, 인프라 개발, 전력스와핑 시스템 등 추진
- (방글라데시) 인도향 불법이민규제, 국제하천 관리 및 개발, 경제협력
- (스리랑카) 중국의 경제 및 군사 영향력 확대 견제 필요
 - 원조 확대로 인도기업 진출 여건 개선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모디, 스리랑카 거주 타밀족 생활권 보장 대스리랑카 정부 요청

□ 모디 총리에 대한 주요국의 기대와 전망(전문가 의견종합)

국가명	동 향 및 전 망
일 본	· 일본, 중국의 급속한 팽창으로 아시아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인도에 적극 구애 · 인도경제의 약점인 낙후된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 일본차관과 지분참여로 델라-뭄바이 산업회랑등 대형 국토개조 프로젝트 추진
중 국	· 중국은 모디의 당선이 자국의 대규모 대인도 투자 개방에 긍정적이라는 반응 · 인도 인프라 개선에 총 3,000억 달러 파이낸싱 의사 표명(China Daily Weekly Asia) · 인-중 영토 문제로 무역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기류로 흐름 가능성 상존

국가명	동 향 및 전 망
미 국	· “모디와 미국의 관계는 즐겁지 않지만 생산적일 것이다.”(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애슐리 텔리스 선임연구원) · BJP 당원들은 ‘05년 미국의 모디 압국 비자 발급 거부로 받았던 멸시를 여전히 기억하며, 일부 당원들은 미국과의 경제 및 방산 교류는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러시아	· 인도가 G7 국가 외 ODA 원조를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 · ‘09.10월, 구자라트 수상 재임 당시 사절단을 이끌고 러시아 방문 · 모디 수상, 트위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축전에 대한 답례
파키스탄	· 모디의 경제 우선 정책, 파키스탄 포함 모든 국가와의 무역 정상화 의미 · 극우 힌두교도인 모디총리 재임기간 중 테러 등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
한 국	· ‘07.5.16일, 구자라트주 투자환경 설명회 참석차 방한 · ‘07.5.17일, 주한인도대사 등 방문단 20여명 이끌고 새만금 방조제 방문 ·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효율적인 수출 주도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라 평가
싱가포르	· 모디는 글로벌 리더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나, 싱가포르 전임 수상은 예외 · 싱가포르 2대 수상 고촉통은 모디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음 · ‘경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조언
대 만	· ‘11년, 대만 최대 규모 사절단 이끌고 대만 방문 · 대만 최대 철강사 CSC, ‘12년 구자라트 주정부와 600억루피 투자 MOU 체결 · FTA 사전조사 ‘13년 완료, 인도측 요청으로 추가 협의 총선 이후로 연기
이스라엘	· 모디 뿐만 아니라 BJP당원들은 대부분 친이스라엘 성향 · 모디 정부의 반테러, 사이버보안, 방산물자 등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부상 전망 · 이스라엘은 구자라티들과 농업 및 하이테크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산 요소 · ㉠ 갠지스강 수질개선 및 클린프로젝트에 참여희망

□ 인도 Look East 전략 요충지, 아세안

- (인도-태국 고속도로) 인도 동북부-미얀마-태국을 잇는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벵골만 연안 사업 활성화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¹⁾, 인도와 동남아 전역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인도-태국 구간만이 미비
- (메콩강 협력체제) MGC 6개국의 관광·문화·교육·교통 등 주요 산업의 무역, 투자 등 상호 협력기반 구축 확대
 - * 메콩-강가협력(MGC, Mekong-Ganga Cooperation): 인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잇는 산업회랑(MIEC, Mekong-India Economic Corridor) 구축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주요국, 인도 영향력 확대 위한 선점 경쟁

- (일본) 아베총리, 모디총리의 첫순방국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두 번째 순방국이 될 전망(아베 공식초청장, 총리실로 6.6일 접수됨)
 - 중국의 패권주의 강도에 대응, 아시아 강대국간 질서, 안정,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일본-인도간 전략적 안보협력강화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
 - * 양국 원원관계를 위한 신평려다임을 구축 중(Global and Strategic Partnership)
 - ☞ 일본 해상이익 보호(인도해군의 일본 유조선 보호, 일본 유조선 85%가 인도양을 통과)
 - * 양국 공히 경제활성화 필요, 중국 패권주의 우려, 민간원자력협정 기대(인도 원전 진출), 일본ODA 최대수원국(연간 12억달러, 19개 프로젝트중 구자라트 7개 소재)
- 아베 총리, 모디의 당선이 결정되자마자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 등록
 - * 아베 총리의 팔로우 대상 계정 3명에 나렌드라 모디 포함



[모디총리, 구자라트주 총리 당시]

일본기업들은 결정하기 전에 아주 세밀하게 따지지만, 결정하면 중단하지 않는다. 일본의 기술, 매서운 규율과 구자라트인의 사업열정이 잘 결합되면 윈윈할 것이 확실하다. 우리 함께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마루티 스즈키 회장, RC Bhargava]

모디가 주총리시절에 다수 일본 기업들이 구자라트주에 투자 진출했다. 구자라트주에 일본 기업들이 이룩했던 성과가 이제는 인도 전역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아베는 '14.5.31일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을 재요청하는 등 'Modi-Abe Bromance' 구축 노력 지속
 - * '14.5.23일 월스트리트저널, 아베-모디 간 협력을 Bromance로 표현, 관심 표명
 - ☞ 일본은 DMIC(델리뭍바이산업회랑), CBIC(첸나이방갈로르산업회랑), 인도-미얀마-태국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확대 등 적극 구매 중

- (중국) 리커창 총리, 외국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축하전화, 모디정부와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해묵은 현안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제안
 - 닉슨대통령의 핑퐁외교와 같이 모디수상으로 양국관계 회복을 기대
 - 인도의 낙후 인프라와 제조업개발을 위한 투자, 노하우와 기술 전수
 - ☞ 신도시, 고속철 건설, 산업회랑, 중국전용공단 조성(마드야프라데시, 비하르, 타밀나두, 구자라트, 우따르프라데쉬주), 경제특구내 기업입주, R&D 센터설립 등
 - ☞ 인도제조산업 GDP의 15%, 2022년까지 25%로 확대 목표(제조산업정책 NMP2)
 - 신실크로드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를 잇는 BCIM³⁾ 산업회랑 구축에 인도측과 협력, 박차를 가할 계획

[BCIM 산업회랑: 지역 게임체인저]

인도 콜카타를 기점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통과해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산업회랑으로, 인도의 Look East 전략과 중국의 서부 대개발·남진정책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추진



☞ BCIM 산업회랑 구축시 장점

- BCIM 구축 지역, 전 세계 인구의 40%인 28억명의 인구 보유
- 중국-아세안-인도 FTA존 설정시 세계 최대 경제벨트 형성
- 콜카타-쿤밍(1500KM)이 콜카타-뉴델리보다 가까워 교역·관광 등 벵골만경제권 형성

- (러시아) 푸틴, '14.7월 브라질 BRICs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 희망
 - 역사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지해 크게 감사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자세를 취함
 - 경제 뿐만 아니라 기술, 국방 등 분야의 협력 증진 기대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모디에게 직접 축하전화, 냉랭한 관계회복 주력
 - 방미 초청, 비자 발급 중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
 - 국무장관 및 백악관 대변인도 트위터 등을 통한 축전
 - * 미국은 모디가 '02년 구자라트주 수상 당시 발생한 힌두-무슬림 유혈충돌 사태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05년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음
 - 국제무대 협력, 인도양 및 남지나해 중국영향력 확대 견제, 통상 및 지재권 분쟁 완화, 인도산 제너릭의약품 FDA승인 제한 및 전문직 美비자제한 완화

첨부: 1. 기타부처(주요 경제부처 제외) 신정부 출범 100일 어젠다(안)

2) NMP : National Manufacturing Policy, 2011

3) BCIMEC : Bangladesh, China, India, Myanmar Economic Corridor

붙임1. 기타 부처(주요 경제부처 제외) 신정부 출범 100일 어젠다(안)

부처명	어젠다
지방개발부	· '13년 개정된 토지취득법 시행 ·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 적용되고 있는 주택법 통합
도로교통부	· 주요 프로젝트 시행 촉진을 위한 유연성 확보 · 주요 기업의 양허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 변경을 용이하게 완화
철도부	· 현 진행 중인 산업화량 촉진 및 고속철 개발 · 철도부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철도요금 현실화 · 지연되고 있는 주요 철도 프로젝트의 빠른 시행 ·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지역 및 석탄 채굴지역과의 연결성 강화
전력부	· 화력발전소에 대한 원활한 연료(석탄) 보급 · 각 주별 전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규제기관의 법 이행이 가능하도록 보장 · 송배전망 확충
국방부	· 주요 방산물자 및 무기 조달 시간 축소 · 국방 및 방산물자 현지화 프로그램 추진 · 민간기업 참여 확대 · 군 병력 보강, 국방부 종합서비스 제공 및 관료와 병력의 협력 강화
해운부	· 항만요율 완화 검토 및 조선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PPP 프로젝트 활성화 및 재교섭을 위한 메커니즘 정립 · 항구 개발기업의 기밀정보취급허가 제도 현실화 · 연안 해운업 진흥을 위한 청사진 제시
통신부	· 적자에 허덕이는 통신산업 개선을 위한 M&A법 개정 및 법규 완화 · 비이성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및 세금부과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 국가통신정책 2012 시행 · 통신업 기업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농업부	· 농민의 열악한 보수 개선 · 농작물 보험 제도 개선 및 보급 확대
화학부	· 가스전 개발지들과의 적자 보전을 위해 신규 가스가격제도 도입 · 도시 가스 프로젝트의 대규모 확대
항공부	· 국영 항공사인 Air India 흑자 전환 · 해외 항공사들의 진입규제 완화 · 인도 항공산업 안전 확보